

# ‘전작권 조기 환수 공방’...“자주국방” vs “위기만 가중”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정도로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작권은 우리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찬반 입장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1950년 유엔군사령관 이양  
10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미군 주도  
외국 사례서 韓유일... 환수 놓고 찬반 엇갈려  
文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식서 조기 환수 의지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부분을 협의했다.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 것은 전쟁 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병력과 무기 체계의 지휘권을 오롯이 한국이 가집을 의미한다.

통상 전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된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갖는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 등과 같은 전쟁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미군과의 협의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작권은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으로 맥아더 유엔 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이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군 주도의 연합방위 구조가 유지, 미군이 전작권

을 갖게 됐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한미 간 논의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수차례 이어졌다. 한미 정부 간 전작권 환수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였다. 당시 양국은 전작권을 시기가 아니라 일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환기로 했다.

이 조건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이

이다. 이와 관련 전작권 조기 환수 찬성론자들은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야 국방력 강화 및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외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전작권을 미군이 가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북한대학원 앙무진 교수는 “독일이나 필리핀 등 전부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지 않다. 자주국방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전반적인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코리아페싱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진다”며 “지금 전쟁이 나면 미국에 맡기는 편이 지 않나. 전작권 환수가 되면 한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방연구원 신법철 박사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합의했으니까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전작권 환수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내에 하겠다는 해석도 있지만 빨리 능력을 갖춰서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다. 군은 이를 위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한국형 3축 체계(3K), 킬체인(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PR)을 구축하고 있다.

신 박사는 “3축 체계를 다 갖추려면 2020년이 넘어야한다. 임기 후반에도 빠른 상황”이라며 “환수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은 이 체

계를 갖추는 시기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력도 강화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대 측은 전작권 조기 환수의 실질적 이익이 없으며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더러 전작권을 환수했다해서 대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내세운다. 한미대로 현 시점에서의 전작권 환수는 오히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신인근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작권 조기 환수의) 실질적 이익은 없다. 자존심 찾는 것 밖에 없다”며 “전작권 환수는 북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정찰 능력,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았을 때 막아 낼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스키텔로 2020년 중후반에 완성되는 것을 앞당기려면 현실적인 예산과 방인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전작권을 환수하면 국방비가 엄청 많이 든다. 미국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느냐”며 “그런 추

가 부담을 각오하지 않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북핵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이야기는 소모적”이라며 “북핵이 없어질 때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실제로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 미국 핵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이 없다면 충분히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해선 힘을 가져야한다.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북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니 한국은 빠지라’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요청해도 북한은 핵 실험을 계속한다. 그 이유는 미국과 대화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뒤 한반도 문제를 맡기라고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북핵을 극복하려면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지금은 한미동맹 밖에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1950년 7월14일	6·25전쟁 중 한국군 전시작전지휘권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1954년 11월17일	휴전 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부여
1978년 11월7일	한미연합사(CFC) 창설 후 작전통제권 연합사령관에게 이양
1994년 12월11일	한국 합참의장에게 정전(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2006년 9월16일	한·미 정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2007년 2월23일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시기(2012년 4월17일)로 합의
2010년 6월26일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조정 (1차 연기)
2014년 10월23일	한·미 국방장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해 전환기로 합의 (2차 연기)
2017년 6월30일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 지속 합의

##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